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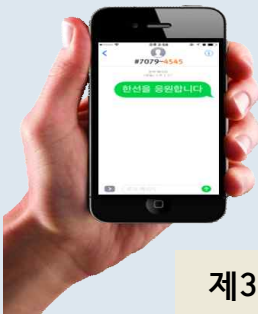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 구현

[발제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일 시] 2019년 12월 05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1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공동체자유주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철학과 정책 기조로 국가를 움직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시장경제는 국가주도경제의 포로로 각각 전락하였다. 87 체제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하였으나 실제적인 국민민복을 위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한 상황

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서양적 자유주의와 동양적 공동체주의의 융합에서 해법을 탐색한다. 국가발전의 원리는 자유주의로, 국민통합의 원리는 공동체주의로 나가야 한다.

■ 공동체자유주의의 비전은 한마디로 선진화다. 정치적으로는 절차가 아닌 국민의 민복을 위해 움직이는 실체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인간을 생각하는 자본주의, 교육·사회적으로는 홍익인간과 법례(法禮)사회, 외교나 대외관계는 세계주의, 대북관계는 선진통일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정책의 판단 기준은 1차적으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다. 제도나 정책이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신장하는지, 개인의 선택 폭을 높이고 선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판단한다. 2차적으로는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제도나 정책이 공동체 가치와 연대·책임을 강화하는지를 판단한다.

■ 정책과제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법치와 함께 자유가 보장된 속의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로서 역할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사법 정책은 사법·검·경의 독립성과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적으로는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의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자강과 연대, 균세의 굳건한 안보를 가지고 선진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여 시장 친화적 규제와 선진국 표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도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과 책무가 함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약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패자 부활이 이뤄지는 일하는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치와 예치, 덕치를 아우르는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창도·통합의 리더십과 경세방략 두 가지가 요구된다. 창도란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설 수 있는 혜안과 열정이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통합의 리더십은 중도의 도량과 실용의 슬기, 소통과 공감 능력으로 사회의 만연한 갈등과 이념 대립을 순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창도와 통합의 리더십이 갖춰진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가 공동체자유주의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경세방략에 있어서는 '변화관리'의 전술을 숙고해야 하며 개혁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들을 통해 학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

◆ 공동체자유주의의 의미

- ◆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민주화를 이루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철학과 정책 기조로 국가를 움직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 ◆ 대한민국은 5~6년 전부터 중우민주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발호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시장경제는 국가주

도경제의 포로로 각각 전락하였다. 87체제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하였으나 실체적인 민복을 위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주의에서도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과잉 자유주의와 모든 것을 정부에 미루는 정부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 ◆ 공동체자유주의는 서양적 자유주의와 동양적 공동체주의의 융합에서 해법을 탐색한다. 국가발전의 원리는 자유주의로, 국민통합의 원리는 공동체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때 공동체는 가족-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 ◆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로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공동체주의를 가미한 것이다. 즉, 자유주의가 필요조건이며 공동체주의는 충분조건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가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집단주의와는 구분된다. 권리로서의 선택적 자유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이성적 자유이며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해야 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자유다. 권력, 다수결, 관행, 여론으로부터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다.
- ◆ 흔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집단주의는 상충하나 자유주의와 동양의 공동체주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때의 조화는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교육·설득·술선·자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 공동체자유주의 정책 기초

- ◆ 공동체자유주의의 비전은 한마디로 선진화다. 정치적으로는 절차가 아닌 국민의 민복을 위해 움직이는 실체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인간을 생각하는 자본주의, 교육·사회적으로는 홍익인간과 법례(法禮)사회, 외교나 대외관계는 세계주의, 대북관계는 선진통일을 기조로 하고 있다.
- ◆ 정책의 판단 기준은 1차적으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다. 제도나 정책이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신장하는지, 개인의 선택 폭을 높이고 선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판단한다. 2차적으로는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제도나 정책이 공동체 가치와 연대·책임을 강화하는지를 판단한다.
- ◆ 공동체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1791년 정조의 신해통공으로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폐지한 사례다. 조치 이후 조선의 상공업이 크게 융성해졌다. 전체 과년도 커졌으며 어려운 이들에게 대한 분배도 개선되었다. 그밖에 1807년 영국 Wilberforth 의원의 노예교역 금지법, 1863년 미국 Lincoln 대통령의 노예

해방,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수용 유상분배를 통한 농지개혁이 그러한 예다.

- ◆ 공동체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과 원칙은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규범·원리의 극단주의를 배제하고 개방·소통의 협치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강·연대·균세의 외교 안보를 추구하며 세계주의와 한반도선진통일을 추구한다. 민간의 자율과 개방, 창의 유연성을 진작하며 기회의 확대와 공정한 규칙으로 자기책임 원칙과 일치하는 복지 확립을 지향한다.
- ◆ 공동체자유주의는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시장은 자유, 정부는 정의, 시민사회는 박애와 연대를 추구하며 정부는 백년대계 국가전략 기획에 역점을 두고 시민사회는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다.

◆ 공동체자유주의 정책과제

- ◆ 정책과제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법치가 이뤄지며 사법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숙의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계파의 수장이 되어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전문정치인을 육성하고 상향식 공천제도를 정착하여 대의정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사법 정책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법무부로 이관하며, 헌법재판소의 법률안 사전 위헌심사제를 도입하고, 대검·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고등·지방경찰청으로 분산해야 한다. 독립기구로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검·경의 독립성과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 ◆ 외교적으로는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의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한·미·일 3자 협력체제를 복원하며 중국에 굴종하는 외교를 종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며 지구촌 난제와 현안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자강과 연대, 균세의 굳건한 안보를 가지고 선진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장기·영구화를 전제로 대응해야 하며 핵 해결까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보해야 한다. 동시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도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경제적으로는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여 기업 규모별 우대·차별정책을 직능별 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 규제와 선진국 표준 적용이 필요하다. 규제, 면허, 감독, 평가, 지원에 편승한 기득권과 지대를 축소하고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 가업 승계를 원활화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플랫폼의 산·학·연 협력과 대·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토지의 과잉·난개발을 억제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모든 양도차익에 적용하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도 시장기능의 작동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도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근로시간 제한의 유연한 적용과 최저임금을 업종·지위·종사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 교육분야에서는 자율과 책무가 함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약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패자 부활이 이뤄지는 일하는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치와 예치, 덕치를 아우르는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 질서를 확립하고 칭찬과 포용, 양보와 응원의 문화, 기부와 봉사가 활성화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 공동체자유주의 리더십과 경세방략

- ◆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창도·통합의 리더십과 경세방략 두 가지가 요구된다. 창도란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설 수 있는 혜안과 열정이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통합의 리더십은 중도의 도량과 실용의 슬기, 소통과 공감 능력으로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이념 대립을 순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창도와 통합의 리더십이 갖춰진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가 공동체자유주의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 ◆ 경세방략에 있어서는 ‘변화관리’의 전술을 숙고해야 하며 개혁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들을 통해 학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하되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는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 과정에서는 제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